

## Education at a Glance 2008: OECD Indicators

Summary in Korean

### 2008 교육 동향: OECD 지표

한국어 개요

- 교육 동향은 국제 비교가 가능한 교육 통계를 요약한 OECD 연간 자료집이다.
- 2008 년 보고서에서는 대학에 들어가는 젊은층이 57%에 이르면서 계속되는 교육 확대 현상을 추적한다.
- 교육제도가 경제성장이 안고 있는 도전요소를 다루는 만큼 국제비교를 토대로 다른 국가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피면서 각국 교육제도를 자체 검토할 수 있다.

## 힘든 선택 또는 힘든 시기-교육 제도 확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 전략

OECD 국가들은 교육 제도의 양과 질을 같이 높이려는 큰 포부를 갖고 있다. 하지만, 공공 예산은 긴축 예산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교육 분야는 압도적으로 공공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가 수요에 대처할 수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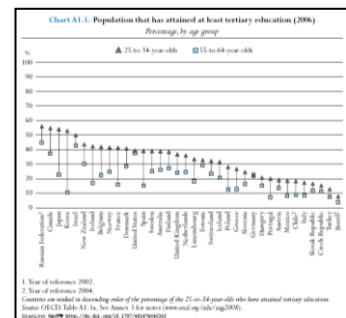
양적 측면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이룬 교육 참여와 성과 증가 추이는 여전히 과거의 수많은 예측을 능가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고등학교 졸업은 거의 보편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고등교육 부문이 가장 많이 확장하고 있다(지표 A3). 1995년 당시 OECD 에서 대학에 들어간 인구는 평균 37%였던 반면 지금은 57%다(지표 A2). 그러나 과거의 동향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급속한 확장세가 급증하는 고속로 근로자의 수요로 인해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속도가 안정되면서 상대적 소득이 감소될 것인지? 20세기 초에 OECD 국가의 고등학교 졸업이 20세기 말에 이처럼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소수였다(지표 C2). 따라서 21세기 말 즈음에 고등교육 수요자 비중이 어떻게 변했을 지를 예측하기란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현재로서 분명한 것은 높은 급여와 더 나은 취업 전망 측면에서 고등교육 자격을 갖추려는 동기 부여는 여전히 강력히 작용한다는 것이다(지표 A8, A9, A10). 아울러, 노동시장의 고학력 근로자 수요는 현저히 늘었다(지표 A1).

적어도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요를 충족하려면 현재의 교육지출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리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고 교육 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최근 몇 해 동안 절대적인 수치 차원에서나 공공 예산 배분에서 지출 수준이 상당히 늘어났다. 지난 10년 동안 모든 국가의 초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전체에 투자된 자금규모가 늘었으며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평균 19% 늘었다(지표 B3). 2005년 OECD 초중고등교육에 할애된 지출규모는 OECD 전체 GDP의 6.1%로, 이 중 86%가 공공 재원이었으며 28개 OECD 국가 중 7개국의 지출규모는 적어도 5%이상을 차지했다(지표 B2). 1995-2005년 공공부담 교육비는 공교육비 비중의 11.9%에서 13.2%로 1%p 이상 늘었던 바, 이에 들인 정부의 노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포르투갈,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교육지출 증가율은 다른 지출부문의 증가율에 맞먹거나 그 이상이었다(지표 B4).

교육분야의 공공지출을 늘리는 가운데 급증하는 학생, 특히 고등교육 학생들을 수용하고 교육기관의 가용 자원을 확대할 목적으로 새로운 자금 출처를 모색하고 있다(지표 B3). 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교육지출은 86%가 여전히 공공재원이지만 1995-2005년 검토대상국 중 대략 3/4 개국에서는 민간재원

**표 A1.3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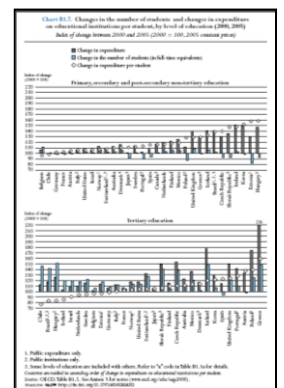
증가율이 공공재원의 증가율보다 높았다. 어떻게 보면  
 고등교육기관의 높은 민간재원 비중은 고등교육을 본래 국가  
 책임으로 보는 시각에 의문을 던지기에 충분한 요소다. 실제로  
 이러한 시각을 대신하여 교육이 가져오는 수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는 만큼 교육제공의 비용과 책임도 교육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개인과 가정, 기업, 정부를 합친 사회  
 전체가 나눠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는 상황이다 (지표  
 B3).

올해 지표에서는 교육투자 증가를 위한 노력이 뚜렷이  
 드러나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재원확보가 인구통계적, 구조적  
 변화에 맞춰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표 B1 과 지표  
 B2 를 보면 1995-2005년 사이에 교육비 증가율은 모든  
 국가에서 학생수 증가율을 앞섰으며 1인당 GDP 증가율까지  
 앞선 국가도 2/3 이상이 된다. 2000-2005년 초중등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1995-2000년보다 적게 늘었지만 1995-  
 2000년 8개 OECD 회원국과 협력국의 증가율은 30%  
 이상이었다(지표 B1, 지표 B2). 그 결과, 지난 10년 간  
 초중등학생 1인당 가용 자원이 크게 늘었다. 여기서 30개  
 OECD 회원국 중 23개국의 5-14세 학생인구가 향후 10년 간  
 줄어들 것으로(지표 A11 2006년 교육 동향) 예상된다. 이는  
 교육예산 총액의 안정기조를 유지한다면 학생 성취도와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에 필요한 추가자원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초중등학생 1인당 자원을 계속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고등교육 차원에서는 양상이 달라진다. 1995-  
 2005년 고등교육 학생 1인당 지출이 학생수 증가율을 못  
 따라가면서 줄어든 경우도 있다. 고등교육 학생수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OECD 내 학생 이동으로 인해 외국인 학생이  
 학비전액을 자비로 부담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압력이  
 더해진다면 추가적 투자 없이는 1인당 교육비 감소세가  
 가속화될 수도 있을 듯하다 (지표 C3). 현재의 추이가 지속되면  
 국가 간의 재원확보의 차이도 잠재적으로 커질 것인데 2005년  
 고등교육 학생 1인당 지출이 러시아연방의 3 421 달러에서  
 스위스와 미국의 2만 달러(지표 B1) 까지 7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추가 재정소요 충당 차원에서 발생될 어려움은  
 적어도 고등교육 차원에 분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예산  
 증가만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므로 교육 투자를 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OECD 경제국이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OECD 국가는 현재 자원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학습성도를  
 평균 22%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2006년 교육  
 동향의 지표 B7). OECD 경제국은 다른 직업분야에서 시도된  
 방식으로 교육의 자체 혁신을 추진하고 비용 대비 최상의 가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 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PISA 결과에 따르면 각국의 교육에 투자된 자원과 학습성과  
 간의 관련성은 중간 수준인 만큼, 이는 돈이 높은 수준의  
 학습성도를 얻는 데 필요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결코 충분한  
 조건은 아님을 보여준다.

**표 B1.7 교육수준별 학생수  
 변화와 학생당 교육기관  
 지출 변화 (2000, 2005)**



금년 교육 동향에서는 이 점에 대해 더욱 논의하고자 각국 정부들이 교육자금투자 차원에서 학생이 학급에서 보내는 시간, 학교에 머무는 연수, 교사 근로시간, 학급 규모 (대리 측정치), 교사 급여(지표 C4, D1, D2, D3, D4) 등, 정책수단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살펴보았다(지표 B7). 고등학교 교육비 지출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은 사실 이면에 다양색의 대조적인 정책 선택이 숨겨져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왜 총 교육비와 학생 성과수준과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은지를 일부분 설명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룩셈부르크는 양국의 현저한 국민소득 차이를 감안해서 산출한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사 월급수준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OECD 평균 10.9%, 한국, 룩셈부르크는 각각 15.5%, 15.2%). 한국은 비교적 큰 학급규모를 감수하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사 월급 지불에 자원을 투자하는 반면 룩셈부르크는 평균치를 넘는 학생 1인당 교사월급이 매우 작은 규모의 학급을 유지하는 데 거의 전적으로 기여한다(지표 B7). 이러한 선택사항은 국가 차원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교육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 이러한 선택과 비용대비가치의 관계에 관한 지식 기반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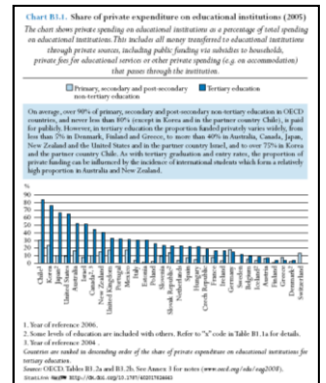
다른 추세들도 여러 가지 드러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등학교 학생의 1인당 GDP 대비 교사월급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1인당 GDP 대비 교사월급이 대개 비교적 낮기 때문인데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이 이 경우에 해당되고 예외적으로 멕시코는 1인당 GDP 대비 교사월급수준이 OECD 평균을 훨씬 앞서지만 대규모 학급으로 이러한 비용을 보상하고 있다(지표 B7).

학생 1인당 지출을 확대하려는 국가들은 지출의 배분 방식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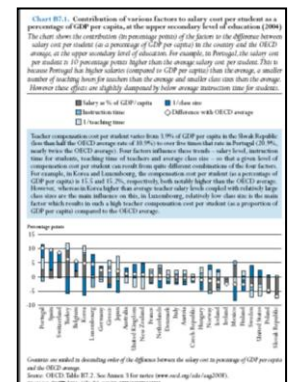
고등교육의 자금조달 방식은 초중등교육과 상이하다. 우선, 고등교육의 민간재원 활용은 초중등교육보다 보편적이고 총공교육비 중 민간재원 비중이 평균 27%이며 호주, 일본, 미국 및 협력국인 이스라엘은 50%를 웃도는 수준이고, 한국과 협력국인 칠레는 75%를 육박하고 있다(지표 B3). 민간재원과 공공재원 간의 균형,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에 다양한 공공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정부의 역량, 이 두가지가 고등교육 자금조달 접근법의 큰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다. 새로운 민간재원의 출처를 모색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공적 자금 투입을 확대하는 국가도 있는데 전자도 후자도 아닌 국가들은 양적 확대와 질 제고를 조화시키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까지 북유럽 국가는 개인과 사회에게 높은 배당금을 지불하는 투자로써 고등교육 부문에서 교육기관, 학생이나 가정에 대한 지원금 등 대규모의 공공 지출을 제공하면서 확대 목표를 달성했다.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의 국가들은 학생과 그들 가족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면서 고등교육 참여를 확장시켰다. 이들 상당 수의 국가에서는 교육기관이 등록금을 책정하며(중종 등록금 상한선이 있음),

### 표 B3.1 교육기관의 민간지출 비중(2005)



### 표 B7.1 1인당 GDP 대비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월급수준에 기여하는 요인 (2004)



학생의 노동시장 동향과 졸업 후 예상급여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달리했다 (지표 B5).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의 대출과 또 한편으로는 불리한 환경의 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같은 재정적 지원 등을 자주 든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소득조건부대출 제도에 더하여 보다 취약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교육과 숙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 보조, 장학금 등, 이미 검증된 지원방법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리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는 데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반대로, 수많은 유럽국가는 대학에 대한 공적 투자를 소홀히 하여 과거의 학생 1 인당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도 공적 투자를 늘리지 못했으며 대학 자체의 등록금 책정도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교육기관의 예산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실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고등교육 학생당 평균 지출이 현재 미국 수준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은 괄목할 만한 비교사항이다. 공적 투자의 확대와 자비 부담의 증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고등교육의 양적, 질적 요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자도 후자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교육제도를 개선하려면 국가정부는 다방면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교육 재원을 적절히 조달해야 한다. 공공지출 배분에서 교육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례는 물론, 교육제도에서 질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 보다 효율적인 예산 분배 방식, 더 많은 민간 재원을 고등교육으로 끌어들이는 방식 등을 찾아야 한다. 또한 형평성을 잃지 않으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수많은 국가에서 아버지가 고등교육을 마친 학생은 고등교육을 받을 가능성도 더 높다는 사실을 지표는 보여준다. 이는 세대간의 학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려책 마련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공공 지원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등 학생을 위한 재정지원책의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고등교육 진입 차원에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여건이 불리한 학생의 학업 지속을 장려하는 데에는 장학금 제도가 더 효과적이고 기타 사회경제 계층의 학생들에게는 대출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일부 있다 (지표 A7, B5).

가용한 자료가 있는 OECD 19 개국을 보면 학생들의 평균 31%가 등록한 고등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지표 A3, A4) 자원 배분의 문제를 넘어서, 학생들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안내 절차를 개선한다면 졸업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지출 압력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표 A1 을 보면 노동시장에서 미진한 성과를 보인 프로그램은 특정 부문에서 늘어나는 인적자원 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OECD 경제에서 숙련된 일자리 비중은 이 일자리에 상응하는 직업훈련 자격과 고학력

수준을 갖춘 인력의 잠재적인 공급을 앞선 수준이다.

교육 진입 개선, 품질 강화, 비용대비가치 촉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교육제도의 성장과 발전을 관리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지만 국가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유능하고 높은 자격을 갖춘 혁신적 시민을 요구하는 지식사회가 정착하는 가운데 증가하는 교육 참여는 청년층과 그들의 가족이 이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다. 고등교육 확장이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순 없으나 국가마다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방식을 마련하여 늘어나는 학생수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사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구와 그렇지 못한 인구로 나뉘지는 양극화된 세계가 될 수 있다.

이는 분명 강력한 정책 선택을 요구한다. 급변 교육 동향의 중대한 목표의 하나는 서로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이러한 정책선택을 내렸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학생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선택과 혼합이 국가마다 상이한 배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더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비교연구는 이 작업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 유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다른 국가에서 기획, 실시하여 달성한 정책의 시각을 통해 각 국가는 자국의 교육제도를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아울러 국제 비교 연구는 교육 서비스의 질, 형평성, 효율성 차원에 실현가능한 사항을 보여주고, 서로 다른 교육제도들이 같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아울러, 올해 교육 동향은 다음의 질문사항에 답을 제공한다: 15세 학생이 과학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 (지표 A5), 학부모가 학교와 과학학습에 관해 갖는 견해(지표 A6),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고등교육 진입에 미치는 영향 여부 (지표 A7), 교육 자금이 투입된 자원과 서비스 (지표 B6),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수준 (지표 C1), 직장내 훈련교육에의 성인 참여도(지표 C5), 교육제도 차원의 평가측정결과 사용 방법 (지표 D5), 마지막으로 교육제도 차원의 정책결정 수준(지표 D6).

OECD 는 현재 국제비교가 가능한 분야뿐 아니라 개념 작업을 위해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정책에 관하여 국제비교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정책 개념과 방법론 측면에 돌파구를 마련한 OECD 교수-학습 국제조사(TALIS)의 발간과 OECD PISA 의 향후 발전, 국제성인능력평가프로그램 (PIAAC) 확대, 고등교육성과평가(AHELO)의 초기 조사 작업 등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전 출판물은 사이트 [www.oecd.or/edu/eag2008](http://www.oecd.or/edu/eag2008)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개요는 인쇄된 페이지에서부터 Excel™ 파일을 제공하는 서비스 **StatLinks** 를 포함시킵니다!

© OECD 2008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